

# 민주 “이태원 참사 철저한 원인규명, 국정조사 필연”

에도기간 종료 인적쇄신 압박  
윤 대통령 공식적인 사과 요구  
한덕수 경질·행안장관 파면 촉구  
당내 내각 총사퇴 요구 목소리도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공식 사과와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경질과 행정안전부장관·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파면을 주장하는 한편 여당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수용을 각각 촉구했다. 참사에 따른 '국가에도 기간'이 전날 24시로 종료됨에 따라 전면적인 인적쇄신을 압박하는 등 추모 정국 이후의 주도권을 쥐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내각총사퇴론'도 제기되고 있으나 일단 여권의 조치를 지켜본 이후,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민주당 '윤석열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경찰 등 누구든 참사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언론 보도와 진상조사로 밝혀지고 있다"며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전면적인 국정 쇄신 ▲ 국무총리 경질과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파면 ▲ 서울시장·윤상규청장의 책임 인정과 진상조사 협조 ▲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수용 등 네 가지를 요구했다.

대책본부는 "수사 대상인 경찰의 셀프 수사로 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리라 기대할 수 없다. 정부 또한 수사 대상으로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객관적이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는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지난 4일 조계사 위령법회 추도사에서 내놓은 입장보다 한층 공식적인 사과의

표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대책본부장인 박찬대 의원은 "대통령의 직위와 권한에 적합하게 대국민 사과문 또는 담화문, 기자회견 형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본부는 에도 기간 이후로도 시민사회와 함께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하며 추모의 뜻을 이어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공식 사과 및 문책성 인사를 외면하고 여당이 국정조사 요구 등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내각 총사퇴 카드와 함께 대외 공세 수위를 끌어 올리는 등 전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반영하듯, 당내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서는 내각 총사퇴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최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내각과 대통령실은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내각총사퇴론과 관련해 당내에서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여권의 조치를 본 이후에 꺼내들 카드라는 것이다.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경찰의 수사 및 검찰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내각 총사퇴 주장이 자칫 '정부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히면서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당장 여당인 국민의힘과 국정조사 관철을 위한 협상을 앞둔 원내 지도부도 메시지 수위 조절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여당의 동참 없이는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힘든 만큼 '내각 총사퇴'와 같은 고강도 공세는 원내 전략적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관여하는 조직의 단체 텔레그램방에 소속 의원들이 포함돼 있다는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는 당이 공식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박찬대 의원은 "텔레그램 방에 (참가자) 이름이 있다고 해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며 "집회 참석은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지난 5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정부 규탄 촛불집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 美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격 전개...北, 탄도미사일 4발로 반발

B-1B 2대, 비질런트 스톰 합류  
北 군용기 집단비행 등 무력시위

북한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한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이 5일 미국 전략폭격기 B-1B '랜서'의 전개와 함께 종료됐다.

미국 전략자산으로 꼽히는 B-1B가 한반도로 날아와 합류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미측의 확장억제 공약 이행 의지를 과시했다.

북한은 애초 4일까지였다가 하루 연장된 이번 훈련 기간에 미사일을 최소 30발 이상 미사일을 쏘아댔고, 한미에 위협적이지는 않아도 무력 시위 성격이 짙은 군용기 집단 비행도 감행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시작한 비질런트 스톰에는 우리 공군 F-35A, F-15K, KF-16 전투기, KC-330 공중급유기 등 140여 대와 미군 F-35B 전투기, EA-18 전자전기, U-2 고공정찰기, KC-135 공중급유기 등 100여 대를 포함해 총 240여 대가 나섰다. 지난달 중순 태평양 광역 배치됐다가 이날 오후 날아온 B-1B 2대는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 F-35A 4대, 미국 F-16 4대와

함께 연합훈련을 시행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북한은 B-1B 전개가 가시화되던 5일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4발을 쏘면서 다시금 반발했다. 오전 11시 32분께부터 11시 59분께까지 평북 동립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된 4발은 비행거리 약 130km, 고도 20km, 속도 마하 5로 탐지됐다.

북한이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연속 대형 도발에 나선 이후인 2017년 12월 B-1B 포함 한미 군용기 260여대의 훈련 이후 약 5년 만에 열린 이번 대규모 공중훈련에 북한은 미사일, 군용기, 담화 등으로 격하게 반발했다.

/연합뉴스

## 윤 대통령 지지율 29%...다시 20%대로 하락

갤럽 조사...부정평가 늘어 63%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이태원 참사' 이후 소폭 하락하며 다시 20%대로 내려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9%, 부정 평가는 63%로 집계됐다.

지난달 25~27일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1%포인트(p) 하락(30%→29%)하고, 부정 평가는 1%p 상승(62%→63%)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9월 4주 차(28%)부터 5주 연속 20%대에 머물다가 10월 마지막 주 조사에서 30%대로 턱걸이해 올랐지만, 1주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험·지질 부족/무능함'(1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9%), '이태원 참사-사건 대처 미흡',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이상 8%), '외교', '독단적/일방적'(이상 6%), '소통 미흡', '인사(人事)'(이상 5%), '대통령 집무실 이전'(4%), '통합·협치 부족', '직무 태도'(이상 3%) 등이 있었다. '모름/응답 거절'은 11%였다.

긍정 평가 이유에는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11%), '전반적으로 잘한다'(10%), '공정/정의/원칙'(7%), '국방/안보', '이태원 사고 수습'(이상 6%), '유능함/합리적', '주관/소신', '경제/민생', '결단력/추진력/독심'(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모름/응답 거절'은 17%였다.

갤럽은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 이태원 참사가 새로 등장했고 관련 언급도 늘어 상반된 시각이 존재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예산전쟁에 참사 책임공방까지... '포스트 추모정국' 곳곳 암초

여야 예산안 심사 돌입 충돌 예고  
참사 문책 놓고도 힘겨루기 전망

'이태원 참사'의 국가에도기간이 지난 5일 종료되며 추모정국 모드였던 여의도에 다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금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 심사가 진행되면서 '예산 전쟁'이 개막하고, 이번 참사와 관련한 상임위가 줄줄이 열리면서 곳곳에서 여야의 공방과 대치가 예상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오는 7일부터 정부가 편성·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내년도 예산안의 분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현격해 시한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민생·경제·안전 예산이 대폭 감액됐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실 이전 등 권력기관 관련 예산 등 5조원 가량을 삭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지출 차원의 안전·지역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등을 확충하겠다고 버티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민생·안전 예산 삭감 주장을 '가짜 뉴스', '예산의 정쟁화' 등으로 반박하는 한편 전임 문재인 정부의 재정 기초를 방

만하고 이념중심적이라고 비판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태원 참사 참사 부실 대응 추궁과 관련된 여야의 공방이 예상되는 상임위 일정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당장 오는 7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가 열린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 주무 부처·기관 책임자들에 더해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출석하는 만큼, 야당의 집중 질타가 예상된다. 이어 8일에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전보장·대통령경호처 대상 국정감사가 예정됐다.

/연합뉴스

**임산부 배려 캠페인**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

임산부는 임신기간 호르몬의 변화로 입덧과 구토, 과다한 피로감, 우울감 등 몸과 마음이 힘들 수 있으며, 특히 걸음로 구분이 잘 안되는 **임산 초기**에는 무리한 활동이나 스트레스가 **유산의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산부배려, 우리 모두 함께해요**

- 임산부 배려석은 **비워두거나 양보하기**
- 줄서기를 하고 있다면 임산부에게 **순서 양보하기**
- 모두에게 해로운 **담배, 임산부에게는 특히 더 조심하기**
- 직장에서 임산부에게 **무리한 근무**와 스트레스는 **금물**
- **출산 전·후 휴가**와 **단축근무** 신청은 **당연한 권리**

보건복지부 | 광주광역시 |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제30-0949873호

**모던건설** (트윈스틸) |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